

대중국 지방외교 과제와 전략(요약)

목 차

- I.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
- II.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
- III. 충남 지방공공외교 3.0 전략
- VI.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

I .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변환

01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

지방 정책 수요 시장의 형성

◆ 냉전해체에 따른 지방의 국제무대 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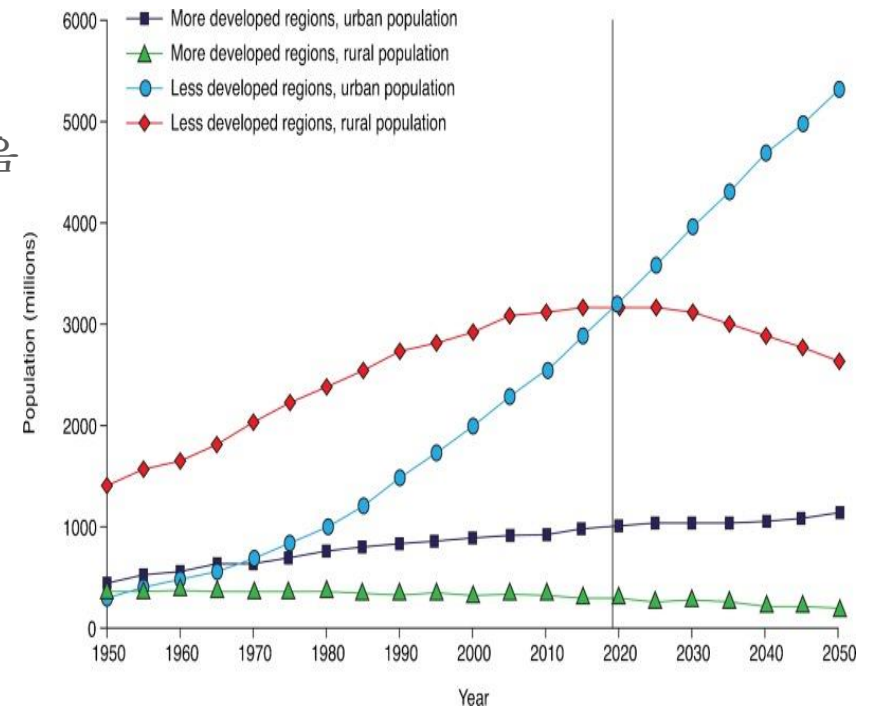
- 냉전시기는 진영논리가 압도적이어서 지방은 국제무대를 벗어나 있었음
- 1990년 구소련 해체 이후 지방이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밀게 됨

◆ 신흥국의 근대화 물결이 가져온 산업화도시화

- 개발도상국, 체제전환국이 본격적인 산업화, 도시화 길을 걸음
- 국가개발정책뿐 아니라 지역정책 노하우에 대한 수요 폭증

◆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방정책시장 형성

- 상하수도, 대중교통, 난방, 전력, 도로, 임대주택 등 분야는 전통적으로 지방공공부문이 담당
- 신자유주의 물결속에서 공공인프라시장(기획, 설계, 시공, 운영 및 투융자)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



[그림] 세계 도시화 추세

출처 :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, UN(2012)

02

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

정책수요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대응

◆ 도시(지역)공공정부 차원의 해외 시장 참여

- 일본 모델: 기술원조, 자매결연 등 비영리사업을 위주로 파트너의 기술과 표준 선점
- 프랑스모델: 해외에서 공공부문이 영리적 활동 전개
- 네덜란드 모델: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상지원을 하며 시장공동진출 방식을 선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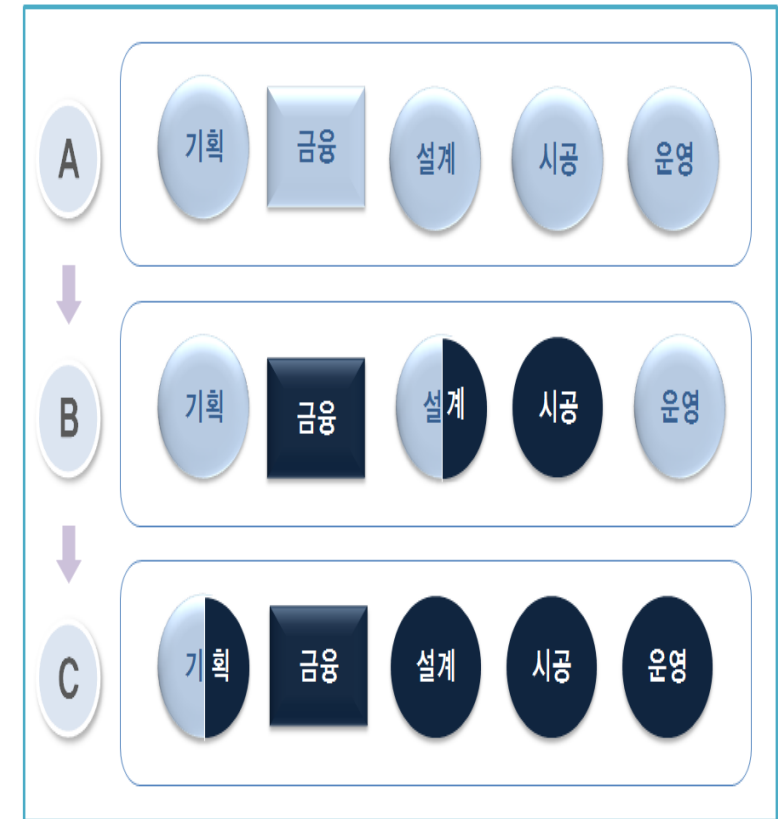
* 무상원조는 신흥국 지역(도시)이 원하는 노하우나 자금을 공급하는데 한계

◆ 국제기구의 대응

- 지방의제 21, 해비태트 II 등 지구적 문제에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 부각
- 비영리 시민단체, NGO의 중요성

◆ 글로벌 기업들이 공공인프라 및 정책 시장에 진입

- 지멘스는 2012년 IC본부(Infrastructure and Cities)를 신설, 인프라 시장 진출
- GE는 에너지, 교통, 물 시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설정, 대규모 투자



* 주 : 공공 민간 금융은 도시인프라 가치사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나 그 중요성 때문에 추가 표기함

[그림] 도시인프라 사업의 가치사슬 상 민영화 추세

03 |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

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전환

◆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 → 선생으로 전환

-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(KOICA: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) 설립(1991)
- OECD 가입(1996년) 이후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
- KDI가 개도국에게 개발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KDI School 개설(2004)

◆ 지방정부의 외교 드라이브

- 포항시, NEAR 사무국 유치(2005); 인천시, GCF 사무국 유치(2012); 서울시, MITI 연수원 유치(2014)
- 서울시, 상수도사업본부 해외시장 진출 (2012)
- 인천시, 중국 텐진시 국유기업CEO 연수프로그램 운영(2014)

그림1 브루나이 PMB성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계약 (2012년 8월)



그림2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사업 1차 사업 준공 (2014년 2월)



[그림]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해외진출

|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| | 報道資料 | 대한민국의 심장, 경제수도 인천!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인천발전연구원 | 2014년 월 일() 총 8매 | |
| 배포 기관 | 인천발전연구원 | 담당자 ☎ (032)260-2671 (김수한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) ☎ (032)260-7733 (김현수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) | |
| 보도일시 | | 2014년 8월 21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
인천발전연구원, 중국 텐진 국유기업 연수프로그램 진행
- 8.24~8.29 중국 기업인 대상 강좌 및 현장수업

- 인천발전연구원(원장 이갑영)은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중국 텐진시 국유기업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.
- 중국 텐진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와 텐진사회과학원의 의뢰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에는 이자즈(尹家智) 텐진중앙계약유한공사CEO 등 텐진시 주요 국유기업의 사장, 부사장급 25명이 참가한다.
- 연수프로그램은 한국과 인천 경제·산업 현황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 등의 전문강좌와 현장수업으로 구성된다.

[그림] 인천시 중국 텐진 국유기업 연수 수행

II.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

01 |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

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변천과정

◆ 내용적으로 초기 교류협력→ 최근 통상지원으로 중심 이동

- 1998년 『외국인투자촉진법』 제정을 기점으로 대외교류가 통상지원으로 중심 이동
- 교류 대상지역이 유럽, 미국에서 중국,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무게 중심 이동

◆ 조직상으로 국제통상국(실) 중심으로 국제업무가 운영되고 있음

- 1998년을 기점으로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서 국제교류 업무 담당 * 이전에는 국제통상협력실(1994), 국제협력관실(1996)
- 이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은 주로 통상지원 위주로 진행

◆ 도와 시군별 인력 조직 편차가 극심

- 도는 전담조직인원이 33명(2016년)
- 시군은 잘해야 팀 수준임: 시군은 지역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임 ex) 당진시 대외협력팀(5명) vs. 청양군 담당자(0.5명)

02 |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

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문제점 ①

◆ 공공외교의 전략적 관점 미약

- 자치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방향성 변화 → 즉흥성 강함, 단기성과 내기에 조급
- 이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 폄하 →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

◆ 공공외교의 통상 편중

- 현 충남의 공공외교는 투자유치, 수출지원, 관광객유치 등 통상지원에 집중
- 통상지원 편중은 공공외교를 통상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형해화
- 통상지원 업무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주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비판 제기
 - 통상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영역으로 이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불합리
 - 통상 관련 의사결정의 관건이 되는 자원이 각 지방에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홍보 활동임
 - 각국의 지자체와 민간의 관계가 나라마다 달라 호혜성이 미흡

03 |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

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문제점 ②

◆ 국제교류관계를 둘러싼 혼선

- 초창기 인맥을 통한 외교관계 수립이 시정되지 않은 채 누적
- 친선, 통상, 정책은 각각 다른 파트너 선정 기준이 있음
- 교류형식 즉 자매결연, 우호협력, 일반 협력 간 불균형

◆ 교류 콘텐츠 미비

- 충남은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체계가 없음
- 충남의 지역정책의 해외 이식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없음
-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교류 진행, 축적 기제 실종

| 구분 | 친선 | 통상 | 정책 |
|----------|--|--|---|
| 파트너 선정기준 | 친밀성 필요지역 혹은 친한 지역 | 상호보완성 | 공통성 |
| 주요활동 | 문화,스포츠 교류 공무원 교환 근무 | 중소기업 수출지원, 투자, 관광객 유치 | 정책 교류 및 협력 공동 행동 |
| 장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호 적대, 불신 해소에 유효 • 교류의 역사가 짧은 상황에서 적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주민동의 확보 용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정부간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성 있음 • 세련된 방식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|
| 단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콘텐츠의 뒷받침이 없으면 적극성이 떨어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속성에 의문 • 경쟁우선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국제외교의제는 부적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당한 정책적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• 주민들의 동의 확보가 쉽지 않음 |

[표] 국제교류 지역 선정의 기준 비교

Ⅲ. 충남 지방공공외교3.0 전략

01 | 충남 지방공공외교 3.0 전략

지방공공외교 3.0의 비전



◆ 충남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걸맞은 지방공공외교

- 충남은 지난 20여년의 경제성장 결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신산업지구이자 도농혼재지역으로 변모(홍원표, 2016)
- 학술적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위성형 신산업지구에 해당(송두범, 2015)
- 충남은 지역정책 교류 영역에서 학생 → (교생) → 선생으로 지위 전환

◆ 충남의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공외교

- 『충남 2030 경제비전』, 환황해전략의 핵심의 성공은 국외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필패
- 충남 일자리의 미래는 서비스업의 발전에 있는데, 국내시장만을 고려하면 서비스업의 발전은 현실성 없음
- 충남은 현재 2.0에 머무르고 있어 3.0으로 도약해야 함

02

충남 지방공공외교 3.0 전략

지방공공외교 3.0의 핵심 전략



① 충남 공공외교의 전략화

- 기존 공공외교의 즉흥성과 의전성을 탈피, 충남의 국제적 지위 제고에 초점
- 공공외교를 도정의 핵심전략의 일부로서 재정립

② 충남 정책 콘텐츠의 국제화

- 충남 지역정책의 경험과 노하우의 국제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
-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자료화, 표준화, 모듈화, 다국어화 할 것
- 충남의 정책 노하우를 외국 지자체와 교류·전수할 채널 확보

③ 충남의 국제협력 세력화

- 동아시아에서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
- 국제적 의의가 있는 분야에서 국제협력 행동 추진

03 | 충남 지방공공외교 3.0 전략

지방공공외교 3.0의 주요 정책

◆ 충남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

- '공공외교법' 시행을 주도적으로 맞이하고 공공외교정책의 제도화를 도모
- 이를 통해 기존 도 및 시군의 국제자매결연 관계의 재정비 추진

◆ 충남 지역정책의 국제연수프로그램화

- KDI School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충남 지역정책 사례의 연수프로그램화 기반 구축
- 도청, 충남연구원, KDI School, 지역대학, 충남공무원교육연수원 등이 협력하여 연수프로그램 수행(2020년 목표)
- * 장기적으로 도립대학에 공공정책대학원 설립 등 방법을 통해 장기발전방안 모색

◆ (가칭) '아시아 신흥공업지역지자체연합' 구축

- 충남과 글로벌 위상에 공통성이 있는 동아시아 지자체들과 (가칭)아시아신흥공업지역지자체연합(ANIRA) 창설
- 국내 충남, 충북, 중국 허베이, 장수, 일본의 ***을 주축으로 구성
- 초기에는 각 지자체 ThinkTank의 연합을 시작하고, 후에 지자체간 연합으로 발전
- 내용적으로 회원 간 공동의 사업 추진: 국제창업지구 동시 운영, 3농 혁신 사례 공동 발굴 및 표창 등

04

충남 지방공공외교 3.0 전략

지방공공외교 3.0 추진체계



◆ (가칭) ‘글로벌 충남 추진단’ 설립

- 도청, 충남연구원, KDI,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관학연 조직 구성
- 2-3년의 한시조직으로서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, 자매결연관계 정비, 충남정책 프로그램화, ANIRA창설 기반 구축 등 총괄
-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며, 필요 시 지역대학 총장, 충남연구원 원장과 공동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음

◆ 통상 기능과 국제교류협력 기능의 분리 운영

- 국내외 사례를 보면 통상 기능을 제외하고 정책 교류가 핵심적 영역을 차지
- 지방외교 4.0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

◆ 도와 시군 간 협력체 구성

- 도 정책의 대부분은 하위 지역단위에서 구현 → 시군 단위를 떠나면 도 정책은 공허해 짐
- 도와 시군 간 국제교류역량 격차는 심한 편 → 실질적 협력과 역량 격차의 상향평준화 위해 협력체 필요

IV.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

01 |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

중국 중심의 지방외교?

◆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≠ 한중 양자외교에 집중해야 한다

- 한반도 지정학적 지위가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이유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접점이기 때문
- 중국과의 교류는 다자간 외교와 양자 외교를 병행해야
- * 8월 귀주성에서 열리는 한중일 3농포럼은 왜 취소되지 않을까

◆ 중국을 국가라기보다는 대륙으로 보자

- 중국 13억 인구(EU 27개국 5억 인구), 지방 행정 위계 4단계(우리나라 3단계)
- 격식 vs. 실용 → 지방외교의 중요성 부각 (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)
- 중국은 4-5개 경제권으로 보고 각 경제권과의 교류협력을 별도로 수립해야 함 * 충남은 중국 각 권역별로 파트너를 가져야 함

02

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

중국 교류 특수성, 판시(關係)?

◆ 중국 정치사회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판시론의 배경

- 법치주의,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관료나 관리층의 재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큼
- 역사적으로 극심한 내란을 반복 경험하여 이너서클의 형성이 비교적 강함(내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함)

◆ 판시론에 담겨진 다양한 문제의식

- 판시는 개인적 친분 또는 신뢰의 의 중요성 강조 → 다른 나라나 민족은 본질적으로 다른가?
- 상호이익 관계가 아닌 상황(불확실성이 큰 사안)을 개인 판시로 돌파하려는 경향을 합리화 도구로 오용: 민간에서 흔함
- 우리나라 대외교류 공무원 담당자는 변동이 잦은 것에 대한 합리적 비판
- 문제는 전략과 단계적 성과에 대한 목표의식 부재 →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신비화하는 경향으로 빠져

03

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

도와 시·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?

◆ 지방공공외교 4.0의 단초 형성

- 친선(1.0), 통상지원(2.0), 정책외교(3.0)를 포함하면서 국제교류협력 주체로 민간(지역언론, 시민단체, 비영리단체 등)이 자리잡는 것
- 지방공공부문은 민간의 국제교류협력의 촉진자와 인도자로서 역할 정립

◆ 지방공공외교4.0의 핵심 추진체계는 국제교류 지방 거버넌스임

- 현재 충남은 지방외교의 주체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음(대학 따로, 종교단체 따로, 지자체 따로)
-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(장기 플랜과 전략의 수립)

◆ 도는 시군과 민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함

- 환황해 국제포럼에 시군, 민간의 목소리와 활동을 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
- 시군의 우수사례(민간활동 포함)에 대한 공식 인정과 표창·포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함

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|--|
|  문화체육관광부 | | 보도자료 | |  | |
| 보도일시 | 3. 2(목) 16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총 9쪽(붙임 7쪽 포함) | |
| 배포일시 | 2017. 3. 2(목) | | 담당부서 |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| |
| 담당과장 | 정영석(044-203-2561) | | 담당자 | 김성겸 사무관(044-203-2562) | |

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」 제정안 국회 통과

· 문화교류 진흥 법적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·

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」이 3월 2일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서, ▲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, ▲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, ▲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·운영, ▲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, ▲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, ▲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, ▲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감사합니다.